

정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고 관리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일정 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토록 허용하는 '사전예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총리 주재로 조해영 내무 김종구 법무 김동진 국방 이효계 농림 윤여준 환경 최광 보건복지 조정제 해양수산장관 등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올 7~8월 두달동안 국립공원, 해수욕장 등 전국의 주요 피서철에 1천만명 이상의 행락객이 몰려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피서철과 행락철마다 무질서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각차원에서 강력한 쓰레기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총리는 회의에서 "무질서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을 위한 체계를 갖추라"면서 "특히 취사금지지역에서의 취사, 고속도로변 쓰레기 투기,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히 조사, 적발하라"고 지시했다.

윤환경장관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나 국립공원 등에서 불법야영, 취사행위자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 산림감시원 등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락지 쓰레기 관리실태를 평가, 공개하고 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등에 일정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전국 2백32개 시·군·구에 1일 처리능력 3천5백25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99년부터는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2001년부터는 전 시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와 용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조내무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토대청결주간'으로 정해 전국 67개 국·공립공원, 7백8개 유원지, 2백3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이농림장관은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영농자재 정제수거기간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조해양수산장관은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월 2회씩 '바다청소의 날' 행사를 갖고 자치단체별 담당구역을 정해 폐어망, 폐어선 등을 집중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

통상산업부가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폐기물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아울러 가전제품 재활용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0일 통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지난 8월 19일 석유화학산업 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판매가중 0.7%씩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아울러 현재 3%선에 불과한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가전 재활용특별법을 제정
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반면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특정
업종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환경부는 또 폐가전 재활용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이미 지난 92년 당시 통산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활용 업무 창구가 일원화돼 있는 상태에서 특
정 품목만 별도 관리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재활용을
위해 별도로 단체나 기업을 만들어 수거와 처리, 재활
용까지 전부담금이나 예치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가전제품의 경우 TV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에 대해 kg당 38원의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업체
들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예치금을 찾아가는 비율
은 3%선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신현국 폐기물정책과장은 "재활용률을 높이
기 위해 통합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행 폐기
물 부과금과 예치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따
라서 특정업계를 위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별도
로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
장"이라고 밝혔다.

하·폐수 슬러지 처리기준 마련해야

국내에서 그대로 소각, 매립되고 있는 하·폐수의
진흙찌꺼기인 슬러지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퇴
비, 매립지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염규진 연구위원은 최근 발
표한 '하·폐수 슬러지 재활용 방안'이란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 주도하에 처리기
준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계몽 등으로 슬러지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야 한
다고 주장했다.

염연구원은 부존자원과 매립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의 경우 슬러지의 재활용이나 자원화가 절실한 만큼
재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슬러지 재
활용 처리기준과 실행규칙 제정 등 관련제도를 정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슬러지는 하·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체덩어리
의 진흙찌꺼기로 유기물과 금속성분 등이 다량으로 함
유돼 있어 비료나 지력향상제로 이용될 수 있지만 국내
에서는 대부분 처리공정을 거쳐 폐기처분되고 있다.

염연구원은 이완관련, 최근 유기질이 많은 분뇨나
음식쓰레기 비료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만 재활용시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발생하는 슬러지
의 종합적인 규제와 숙련된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중금속 허용기준인 '하수 슬러지 이용
과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2백개가 넘는 슬러지
퇴비화시설을 갖춰 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그로코(GroCo)'라는 퇴비를
가정 정원과 공공시설용으로 공급하고 슬러지를 경작
지, 목초지, 과수원 등의 지력향상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의 경우 탈수 처리된 슬러지를 이용
해 탄광지대를 농경지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는 벨기에도 슬러지를 모래와 혼합, 매립지의 복
토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슬러지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도 슬러지에 들어있는 중금속, 병원균,
염화폐물 등 독성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

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 사용 단계적 강력 규제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력히 실시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이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일회용 도시락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8월 2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선에 불과한 일회용품 폐기물 부담금의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오는 2001년까지는 요율을 65%까지 끌어 올려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엄청난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일회용 도시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행사시 공공기관부터 도시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총리훈련에 반영시키고 일회용 도시락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도시락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스티로폼 용기나 포장랩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곧이어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닐쇼핑백을 여전히 다량 사용하는 백화점에 대해서는 비닐쇼핑백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쇼핑백을 대체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억제방침이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관심이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보고 백화점과 목욕탕, 숙박업소, 식당 등에 대해 현재 연간 1회씩하는 일회용품 사용단속을 앞으로는 연간 4회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 신현국 폐기물정책과장은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정부가 억제권고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한달동안을 일회용품 사용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환경지수 10월말 선보인다

환경오염실태를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종합환경지수가 10월 말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의 물가지수처럼 각종 환경오염문제 등을 지수로 정형화한 종합환경지수를 통계청과 공동으로 개발, 매년 발

표키로 했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종합환경지수에 반영되는 지수로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개별항목에서 벗어나

- ▲지구온난화 ▲독극물 ▲자원고갈 ▲스모그
- ▲생물다양성 ▲소음진동악취 ▲오존고갈
- ▲산성화 및 토양오염 ▲부영양화 등 99개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환경통계가 체계적으로 잡힌 지

난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연도별 환경지수를 작성한 후 환경문제가 당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된 90년을 기준으로 해 종합환경지수를 '100'으로 정할 방침이다.

즉 90년의 종합환경지수 100을 기준으로 종합환경지수가 100을 넘을 경우 환경여건이 나빠진 것이며 반면에 100 이하로 떨어지면 환경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 된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앞으로 이들 9개 항목이외에 다른 환경문제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종합환경지수에 다른 환경항목까지 포함시키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마칠 방침이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곧바로 종합환경지수 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10월말께, 늦어도 11월안에는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종합환경지수를 작성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황홍석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을 검토중인 종합환경지수를 작성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환경정책 역시 보다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시정장에 주범은 미세먼지

수도권 시정장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으로 시정장을 일으키는 스모그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환경연구원은 과거 10년간 기상청 시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낮평균 시정은 9.5km, 계절별로는 가을철이 평균 11km로 가장 양호했고 겨울철에는 평

균 8km로 가장 나빴으며 1년중 44일(전체일수중 12%)은 4km이하였다고 말했다.

시정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대기중 직경이 2.5 μ m(마이크로m, 1백만 분 1m)이하인 미세먼지의 기여율이 무려 95%(미세먼지에 의한 빛의 산란 78%, 흡수 17%)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은 가스상 물질로부터 물리·화학적 변환에 의한 것이 40.2%(황산염 입자 27.3%, 질산염입자 9.6%, 유기화합물 3.3%)로 가장 많고, 자동차 35.6%(디젤 자동차 25.6%, 도로비산먼지 5.1%, 가솔린자동차 4.9%), 연료의 연소에 의한 것 7.5%, 미확인 16.7% 순으로 집계됐다.

환경연구원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중인 오염물질 저감계획대로 오는 2000년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50% 절감할 경우 시정이 최고 20%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기중에 떠다니는 총부유먼지(TSP)와는 별도로 인체에 흡입돼 폐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큰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직경 10 μ m이하인 먼지(PM10)를 대기환경기준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생태계 보호지역 금대봉 크게 훼손

희귀동식물 보호를 위해 출입절대금지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 사람들의 마구잡이 입산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93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금대봉 일대 4.2km²는 풀 한포기 채취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이 절대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보호목인 주목이 도벌꾼에 의해 대규모 잘려지는가 하면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생태계가

등산객은 물론 사진촬영 등을 위한 일반인의 발길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지난 9월 1일 태백시민들에 따르면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내 구등산로 주변은 입산객이 버린 술병과 음식포장지 등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으며 금대봉 입구 검용소와 7부능선 한강발원샘 주위에는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이 남아 있다.

환경부는 금대봉의 무분별한 입산을 막기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해 놨지만 단속직원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태백시도 단속인원부족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백시는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인 검용소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태백문화원은 지난 7월 이곳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한강대제를 여는 등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에는 홀아비바람꽃 등 한국고유물 15종을 비롯 공작고사리 등 희귀식물 16종, 하늘다람쥐 등 희귀동물 1백38종, 버섯 52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수질 환경기준 선진국수준 강화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녹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질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5일 상수원에서의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유역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산업폐수시설(공장)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질소(60ppm)와 인(8ppm) 배출기준을 내년부터는 주암호와 충주호, 소양호 등 주요 상수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14개의 수질환경 기준 항목수를

3~4년안에 선진국 수준인 28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추가될 벤젠, 톨루엔 유기화합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시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의 환경기준을 현재 1당 0.1ppm에서 0.01ppm으로 비소는 0.05ppm에서 0.01ppm으로 10배와 5배씩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현재 개별법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해 ▲관리체계강화 ▲수질개선용 재원확보 ▲환경기초시설 설치촉진 및 지원주민사업확대를 위해 '상수원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2천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등 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정책목표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하천수질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